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110
----------	------

발의연월일 : 2025. 2. 12.

발 의 자 : 김예지 · 최형두 · 박덕흠
김승수 · 엄태영 · 장동혁
진종오 · 장종태 · 김소희
고동진 · 서명옥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 및 지침 등에 근거하여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길 가장자리 및 차도에 설치된 정류소로 인하여 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정류소의 설치 위치 및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도(歩道)가 아닌 곳에는 원칙적으로 정류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보도가 아닌 곳에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며, 정류소 등 대중교통시설의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

13조의3 신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정류소의 안전 확보) 정류소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步道)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보도에 설치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정류소의 실태조사 등) ① 시·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정류소의 설치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교통시설의 설치·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치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3조의2(정류소의 안전 확보) 정류소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歩道)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보도에 설치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13조의3(정류소의 실태조사 등) ① 시·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정류소의 설치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교통시설의 설치·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치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